광주 기초 선거구 쪼개기 '코미디'?

싹쓸이 비난에 민주 지도부 공천 배제 움직임… 진통 예상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 광주시내 기초의회를 싹쓸이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아온 민주당이 뒤늦게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센데다가, 텃밭인 호남 지역 밖에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 같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 기초의회 싹쓸이를 위해 '당론'이라며 경찰력까지 동원해 선거구 쪼개기에 나선 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들만 '코미디'를 연출한 셈이 됐다.

◇뒤늦게 "잘못됐다"=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광주시의회가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 소수 정당의 진입을 막은 것과 관련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소수정당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는 보장해줘야 한다"며 "두 명을 뽑는 선거구가 두 개 있다면 한 곳은 두 명을 공천하되 다른 한 곳은 한 명만 공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민주당 지도부가 뒤늦게 수습에 나선 배경은 우선 국회 정개특위에서 한나라당이 내세우고 있는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도입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현재의 중대선거구 기조가 그래도 유지돼야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약세인 영남·충청·강원 등지에서 기초의원 진출이 용이하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동안 민주당은 국회 정개특위에서 기초의원 소선거구제는 한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싹쓸이하는 구도를 심화시키고 국회의원이 지나치게 지방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며 도입 불가 입장을 견지해 왔다.

기초의원 선거구 분할은 6월 지방선거에서의 야권 연대에도 도움이 안된다. 실제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소수 야당과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광주시의회의 2인 선거구 분할과 관련,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에의 야권 연대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수습가능하나=민주당 지도부의 광주시 일부 기초의원 선거구에서의 공천 배제 카드는 일단 현실화 가능성이 크다. 광주시 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광주시의회의 조례 재개정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공천 배제는 상당한 진통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선거구 분할을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시를 받은 시의원들이 주도한데다, 광주시당 입장에서는 1석이라도 더 차지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하기 때문이다. 정세균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조례 강행처리 전까지는 특별한 입장 표명을 한 바도 없다.

광주 모 국회의원은 "아무 말 없다가 뒤늦게 공천을 하지 않겠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강박원 광주시의회 의장의 측근도 "당론이라고 해서 한 것인데 지금 와서 무슨 말이냐"고 반발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가 21일 오후 나주 자모마을을 방문, 주민들과 동네를 돌아보고 있다. 이 마을은 손 전 대표가 지난 2006년 민심대장정 때 자원봉사를 했던 곳이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민주 잠룡들 "호남 우군 확보하자"

정동영 16일·손학규 21일·정세균 23일 광주·전남 잇단 방문

6·2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민주당의 잠재적 대선주자인 정세균 대표와 손학규 전 대표, 정동영 의원이 경쟁적으로 광주와 전남지역을 방문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의 잇단 호남 방문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많은 우군을 확보, 차기 대선후보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돼 민주당 공천 경쟁 분위기를 더욱 달아오르게 하고 있다.

손 전 대표는 21일 나주를 방문, 나주시장 민주당 경선 출마를 선언한 임성훈 전 경기도벤처협회장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기념회에서 임 전 협회장과의 인연을 소개하고 지지를 부탁한 뒤 지난 2006년 민심대장정 때 자원봉사를 했던 나주시 자모마을을 찾아 주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정세균 대표도 23일 광주를 방문,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조선대 정책대학원에서 특강을 할 계획이다. 정 대표는 이날 특강 후 광주·전남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개혁공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정동영 의원도 지난 16일 광주를 방문, 광주시장 예비후보 등 지지자들과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에 합동 참배한 후 민주당 광주시당을 방문, 당직자들을 위로하고 기자간담회도 가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지방선거 핫코너

정동채 "中企 살리는 정책 우선돼야"

정동채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을 살리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현재의 중소기업 지원방안이 자금지원과 창업·교육지원에 집중되어 있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정책이 아쉽다"면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 대기업·중소기업 간 협력촉진센터 설치, 중소기업 근로자 의료·편의 등 복리증진 사업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섭 평동 포 사격장 이전 촉구

민주당 이용섭 국회의원(광산을)은 21일 김태영 국방부장관에게 광주시 광산구 평동, 삼도동 일대 포 사격장 이전 계획 등을 공식 질의하고 빠른 이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이날 "포 사격장 때문에 대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저해되고,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주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포 사격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광주시 동구 증심사 입구에서 펼쳐진 포 사격장 이전 촉구 서명운동에 참석했다.

양형일 "현역 경선논의 참여 넌센스"

양형일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21일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강운태·이용섭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들이 지방선거 경선방식 심의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넌센스"라고 강도 높게 성토했다. 양 후보는 "자신이 출전하는 레이스의 규칙을 선수 스스로 결정하는 사례는 지구상에 없을 것"이라며 "특히 시장경선에 지원세력이 될 수 있는 기초단체장과 시·구의원 공천심사에서도 두 의원이 추천한 인사가 참여하는 문제도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김선옥 1천인 시민패널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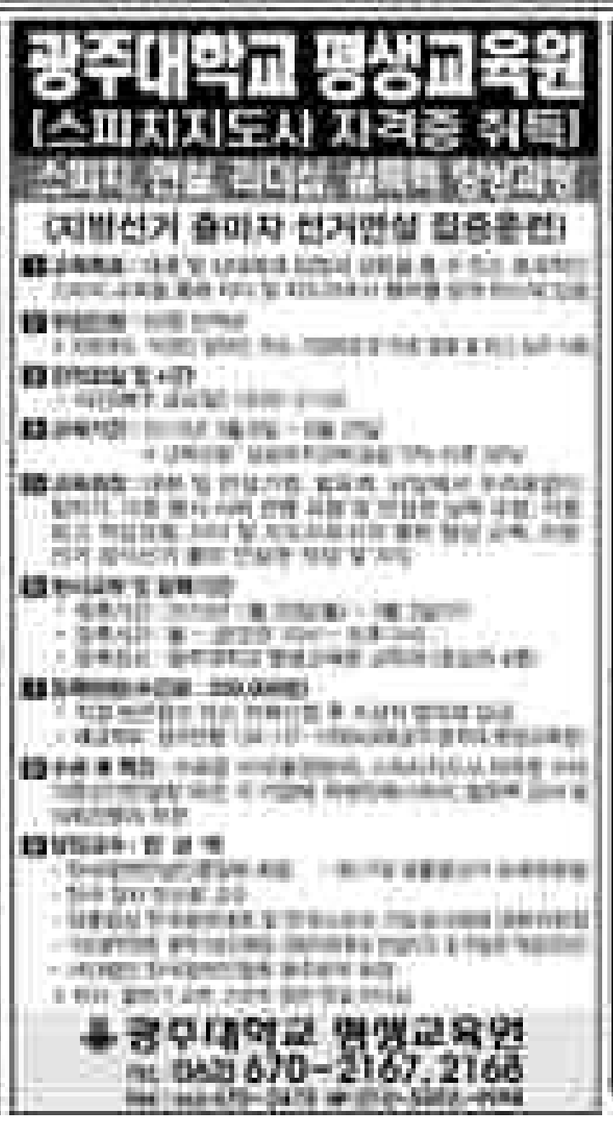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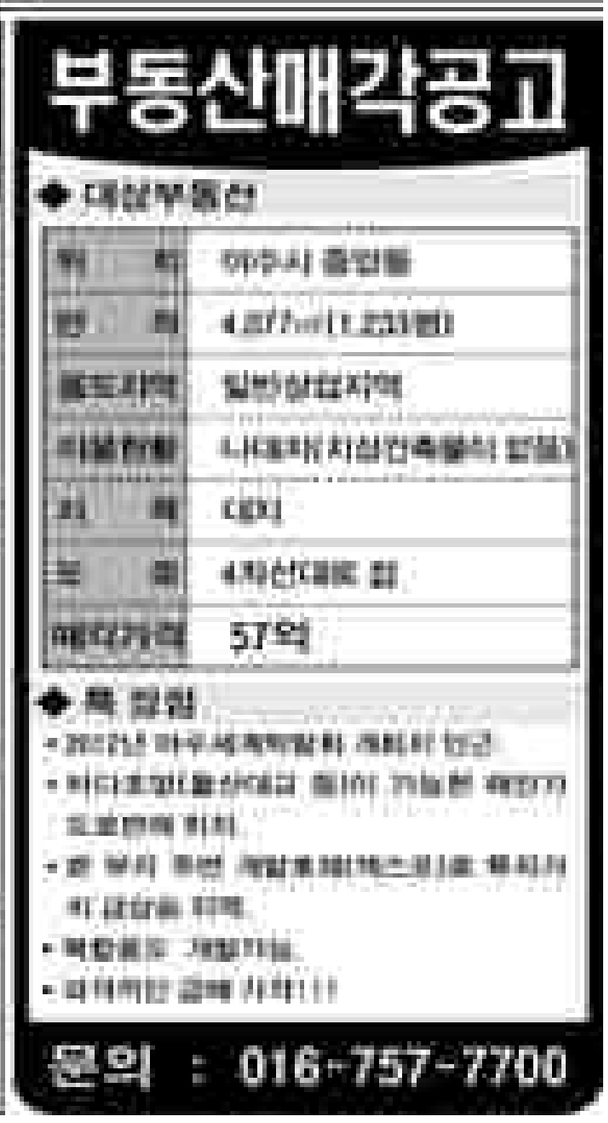
김선옥 광주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21일 "주요 정책의 입안, 추진, 평가 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1천인 시민패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지역·분야·연령별로 시민패널 1천 명을 선정하고, 관 주도가 아닌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하겠다"며 "시정의 다양한 정책이슈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시민여론수렴체계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최희동 시의원 예비후보 등록

최희동 전남대 총동창회 사무총장은 지난 19일 광주 북구 선관위에 제4선거구(용봉동, 오치1·2동, 임동) 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전방(주)과 일신방직(주)을 차례로 방문해 임직원들과 면담을 갖고 임동의 현안인 한국아델리움 아파트~일신방직 간 인도 개설 문제를 협의했다. 최 예비후보는 북구가 고속도로 때문에 광주지역 균형 개발에서 소외되고 있어 이 문제의 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염동익 광주시의원 출마 선언

염동익 전 서구의회 의원은 지난 19일 광주시 서구 1선거구(양동, 양3동, 농성1·2동, 화정1·2동) 광역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조영택 국회의원 특별보좌역과 민주당 광주시당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염 전 의원은 "노인·청소년·저소득층 문제에 대한 정책 대안을 통해 서민과 소외계층이 우대 받는 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